



---

이슈브리프  
**ISSUE BRIEF**

---

발행일 : 2020년 11월 26일 (목)

**CONTENTS**

- 해외 석학들이 본 바이든 新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망
- 스타트업 해외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 음식배달 라이더 현황 및 업계 건의 사항

# 이슈브리프

(IB 2020-14)

---

## CONTENTS

I. 해외 석학들이 본 바이든 新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망 / 1

II. 스타트업 해외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 13

III. 음식배달 라이더 현황 및 업계 건의 사항 / 23

---

발 행 인: 지상욱

편 집 인: 김창배

편집위원: 임춘건, 이윤식, 나경태

편집간사: 김진솔

발 행 일: 2020년 11월 26일

발 행 처: 여의도연구원

인 쇄: 디엔시파크

# Contents\_

금주(11월 4째주)는 바이든 외교안보정책, 스타트업 해외사례, 배달라이더업계 실태 등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세계 석학들이 전망한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중국·대북정책, 동맹관 등 외교안보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분석했습니다. 제2편에서는 주요국가 스타트업 성공사례를 분석, 국내 스타트업 진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제3편에서는 배달 라이더들이 겪고 있는 업계 실태를 진단, 보호정책 마련 등 업계 건의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 제1편: 해외 석학들이 본 바이든 新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망 (이인배 외교통일정책실장)

세계 석학들의 분석을 통해 바이든 신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전망하고자 함. 바이든 신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다자주의에 기초한 대중 압박전략”이 될 것인데, 중국에 대해서 3C(△Cooperation: 협력, △Competition: 경쟁, △Confrontation: 대치) 정책이 혼합된 ‘선택적 대결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임.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이 과거와 달리 미국 신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 도발이 아닌 대화와 협상 등 다른 방식을 취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발맞추어 바이든 신정부도 지속적 대북 대화 의지를 표명하며 상황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진단

## 제2편: 스타트업 해외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전규열 폴리뉴스 정치경제국장)

국내 스타트업 투자가 정부 지원정책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민간 스타트업 육성과 생태계 구축은 여전히 답보 상태. 반면, 주요국들은 △규제완화, △금융지원, △세제혜택, △실패를 용인하는 ‘다브카’ 문화, △글로벌 VC와 글로벌 IT기업 유치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성공사례를 축적해 가고 있음. 특히 민간투자가 활성화된 미국과 중국 등이 창업환경개선과 멘토링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필요. 인센티브 다각화, 세금감면 등 민간자본 유치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VC와 글로벌 IT기업 투자자의 국내 유인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

## 제3편: 음식배달 라이더 현황 및 업계 건의 사항 (이영주 라이더유니온 정책국장)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배달 확산으로 외식업과 음식배달업의 성장은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음식을 배달하는 라이더들은 열악한 처우와 사고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음. 고용형태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위로 인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전반의 미비로 인해 유상운송보험 역시 가입하기 힘든 상태임. 이에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및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정비 등 적극적 보호 정책이 필요함

# 1. 해외 석학들이 본 바이든 新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망1)

작성: 이인배 외교통일정책실장 (lee.in.bae@ydi.or.kr)

세계 석학들의 분석을 통해 바이든 신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전망하고자 함. 바이든 신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다자주의에 기초한 대중 압박전략”이 될 것인데, 중국에 대해서 3C(△Cooperation: 협력, △Competition: 경쟁, △Confrontation: 대치) 정책이 혼합된 ‘선택적 대결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임.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이 과거와 달리 미국 신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 도발이 아닌 대화와 협상 등 다른 방식을 취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발맞추어 바이든 신정부도 지속적 대북 대화 의지를 표명하며 상황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진단

## 1. 美 대선 이후, 미국 정세: 초당적 리더십의 필요

- 바이든 신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감염 확산 차단 및 감염자 관리에 최우선을 둘 수밖에 없을 것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 바이든 신정부에게는 산적한 과제가 너무 많아, 북한 이슈는 후순위가 될 것임. 이번 인수위에서도 국내문제가 중심이 되었음 (빅터 차 前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 코로나-19는 민주주의의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등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음. 민주주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인권의 제도화를 강화하고 미국의 저력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됨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1) 본 보고서는 『조선일보』에서 주최한 “아시안리더십컴퍼런스(ALC)”에 참가한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한 것임

- 이번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美 국민들의 거부였지만, 그가 추진한 정책기조, 즉 “트럼프즘(Trumpism)”을 거부한 것은 아님 (수미 테리 CSIS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
  - 트럼프 지지표는 7300만표로 역대 득표 중 가장 많았음
  - 단, 트럼프즘은 불문율을 파기하고 미국 내 정치 분열과 양극화를 심화
  - 만약 공화당이 상원을 지속 장악하게 될 경우, 코로나-19, 기후변화 대응 등 신정부의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음
- 결국, 신정부는 정치적·경제적 양극화 문제 해결이란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된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

## 2. 신정부의 아·태지역 정책: 새로운 아시아 회귀정책

- 국내정책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최고의 대외정책은 국내 과제들을 잘 챙겨서 강력한 미국을 만들고, 이를 통해 경쟁국들에게 미국의 저력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중요 (빅터 차)
- 신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모든 대외정책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 구축해 놓은 일본, 호주, 인도와의 다자적 네트워크는 향후 국제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틀이 될 것임 (커트 캠블 前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추진한 친밀한 관계를 통한 외교정책을 일본, 호주, 인도 등에도 적용하여, 지도자간 개인적 유대를 통한 안정적 외교관계를 구축해왔음

- 이러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다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오바마 정부 시절 ‘아시아 회귀정책(Pivot to Asia)’이나 ‘재균형 정책(Rebalancing)’ 이상으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로 국제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시아 국가들도 코로나-19 이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음. 따라서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 (키트 캠블)
  - 트럼프 정부는 ‘통상 불균형 문제’ 등을 제기하며 아시아가 미국의 발전을 발목 잡는다면 인식이 강했지만, 신정부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
- 트럼프 정부 시기 ‘아시아 중시 정책(인·태전략)’의 핵심 목표가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도 유사한 정책을 취할 것 (수미 테리)
  - 2020년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인도·태평양 정책 용어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상 중국을 전략적 경쟁대상국으로 간주하며, 홍콩 사태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어필할 것
- NATO 같은 안보체계가 아시아에 들어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 특히 쿼드(Quad)가 군사적 동맹 성격이 강했지만, 정치적 대화에 머물러 있어서 실질적 진전은 없었음 (수미 테리)
  - 구조적으로 대만, 베트남, 한국 등이 미국의 쿼드(Quad) 합류 요청에 응할지도 미지수

### 3. 바이든의 중국 정책: 3C(협력, 경쟁, 대치)의 혼합 정책

- 대부분 학자들은 중국이 평화와 번영시대를 저해하고 민족주의적 대외정책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바이든 신정부는 동맹과 연합해서 중국을 다룰 것으로 전망
  - 오바마 정부 시기에는 해군력 향상이 미비해서 현실적으로 자유 항해 작전 등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음. 보다 적극적으로 인·태지역에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 개입 정책을 추진할 것 (브루스 클링너)
-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중국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를 주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과의 경쟁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 (커트 캠블)
- 전문가 대다수는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정책은 지속될 것이나 강도와 스타일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중국과 바이든 신정부와의 관계는 3C로 협력(Cooperation), 경쟁(Competition), 대치(Confrontation)가 혼합될 것 (조셉 윤 前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 협력분야: 보건, 기후변화, 북한 문제 등
    - 경쟁분야: 경제 통상, 5G 등
    - 대치분야: 남중국해, 인권문제 등
  - 중국 대응에 있어서 인권문제가 부각될 것이지만, 미국과 중국 간 이해가 맞는 부분은 협력할 것으로 전망 (랜들 슈라이버 前 미 국무부 인도 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 트럼프는 중국과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력하지 않으며 오로지 공산국가를 적대하기만 했고, 이로 인하여 북한 문제에도 중국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견해도 있는 바,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간 협력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 (조나단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신정부 간의 대중 정책에 대한 근본적 차이
  -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봉쇄’하고자 했다면, 바이든은 중국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이 될 것. 따라서 바이든 신정부는 중국을 세계에서 디커플링하기 보다 미국의 경쟁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 (김성한 前 외교부 차관)
  -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일관된 전략적 목표가 부재했고 그 결과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엇박자가 발생했던 바, 바이든 신정부는 현실적이면서 정교한 대중정책을 통해 군사갈등을 피하면서도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 (조나단 폴락)

#### 4. 바이든의 동맹관: 한반도를 넘어선 협력 관계 추구

-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정책은 일방적, 강압적 모습을 보였음
  - 쿼드+ 구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편가르기를 시도했으나, 아시아 국가들은 군사는 미국에 의지하면서도, 무역관계는 중국에 의지하는 양면적 입장을 유지하고자 함 (브루스 클링너)



- 미국은 한국이 중국 억제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사실 명확한 입장 취하기 어려웠음 (수미 테리)
- 향후 한미동맹은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기 위해 한반도를 넘어선 안보 틀에서 '새로운 이익'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스티브 비건)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에서 협력하는 것도 중요 (랜들 슈라이버)
-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대부분 학자들이 전망
  - 한·미간 협상을 통해 이미 합의된 것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함으로써 해결되지 않았음. 따라서 바이든 신정부 출범 이후 협상이 빠르게 진전될 것 (마크 리퍼트 前 주한미국 대사)
  - 한·미 동맹관계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 (수미 테리)
  - 바이든 신정부는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국 및 북한 문제를 대응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의견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김성한)
- 향후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서 미군 주둔비용 부담 같은 국지적인 문제보다, 미군의 근본적인 목적에 주목해야 할 것을 주문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 한미연합작전은 상호호혜적 영역인 바, 한·미의 기술적 개선을 통해 북한 핵무기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미사일 방위 능력 향상에 주력할 필요
  - 또한, 향후 새로운 의제들 즉 사이버 안보,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과 관련하여 새로운 협력이 필요할 것 (마크 리퍼트)
- 많은 석학들이 동맹문제에 있어서 현안은 한일관계로 보고 있으며, 한·일관계 회복이 중국 문제와 북한 문제 해결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
- 한일갈등으로 중국에 대한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바이든 신정부는 양국 관계에 조금이라도 압박을 가해서 한일관계 진전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 (커트 캠블)
  - 한·일간의 상향식 커뮤니케이션이었지만, 앞으로 탑다운 방식의 대화를 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커트 캠블)
  - 한일관계는 양국 지도자가 너무 표심을 의식해서 정치적 문제가 되었음.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도 더이상 개입하지 못한 것. 바이든 신정부는 한·미·일 3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일관계를 개선할 것으로 전망 (조셉 윤)

## 5. 바이든의 대북정책: 한·미·일 공조로 북핵+인권 동시압박

-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은 진실이 명확히 드러났다는 점임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 정상회담 쇼와 비핵화에 대한 환상뿐이었으며, 미·북간 비핵화 합의가 나왔지만 아무도 신뢰하지 않음

- 김정은 위원장은 주요 핵시설을 은닉하려는 시도만 보이고, '핵/ICBM 실험 중단 + 핵활동 눈감아주기'라는 미·북간 신사협정만 있었을 뿐임
- 향후 미·북 협상에 대해 대부분 학자들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보다 정상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하게 될 것으로 전망
  - 뒤로 가지는 않을 것이고, 쇼도 없고, 전략적 인내도 없을 것임. 명확한 것은 동맹과의 조율을 통해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임 (크리스토퍼 힐 前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 김정은과 트럼프의 브로맨스는 더이상 없을 것. 즉 깡패, 독재자에 대해 다정하게 대하는 미국 대통령의 모습도 없을 것 (브루스 클링너)
  - 관련 국가 중 바이든만 새로운 인물.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임. 지금까지 모든 노력은 다했음(6자, 4자, 장관급, 정상급 등등). 김정은 위원장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음 (랜들 슈라이버)
-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채 취임했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외교에 많은 경험이 있고, 북핵 협상에 관여해 본 적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 (조셉 윤)
- 실무협상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오바마 정부와 유사할 것.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단계적 비핵화' 추구 가능성이 높음 (수미 테리)
  - 핵물질 생산 동결 및 추가생산 상한선 설정, 영변시설 폐쇄에 대한 부분적 또는 전면적 제재 완화 여부 문제가 중요할 것
  - 북한도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보여야 하는데, 우선 모든 핵 시설을 공개하고 사찰을 받아야 함

- 바이든이 정상회담을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전제조건이 필요. 정상 회담 전에 사전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빅터 차)
  - 실무 전문가 차원의 외교가 추진될 것인데, 핵심은 ‘검증’ 가능성 문제임. 트럼프는 본인의 얼굴을 걸고 올인했지만 성과는 없었음. 미국은 디테일을 간과했고, 북한은 수십년 기다린 기회를 날려버린 것
-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위한 첫 단추와 마지막 단추는 결국 중국과의 협력이라는 것을 바이든 신정부는 잘 알고 있기에 대북관계와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 중국과 협조에 심혈을 기울일 것 (에드윈 풀러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 바이든 당선인은 외교위원장을 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인 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분주하게 찾아갈 것 (에드윈 풀러)
  - 인권 특사를 임명하는 상징적 조치부터 시작할지 여부도 주목해 봐야 할 것
  - 바이든 당선인은 인권에 관심이 많고, 야당이 된 공화당도 여당 때와는 달리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 (조셉 윤)
- 대북 제재가 충분히 발휘되는 환경에서는 대북지원이 대화에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인 바,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개입 (engagement) 정책이 필요함 (마크 리퍼트)

## 6. 북한의 도발 가능성

-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
  - 미국의 신정부 출범을 전후로 북한의 도발이 있었음. 특히 트럼프가 재선하지 못하고, 바이든이 등장했기 때문에 도발 가능성이 더 높아짐. 이는 신정부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것 (빅터 차)
  - 다만, 현재 북한도 매우 조급한 상황이어서, 과거와는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음 (빅터 차)
  - 북한은 핵실험이나 미사일로 미국 신정부를 맞이해 왔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왜냐하면 북한도 도발로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 (조셉 윤)
- 북한의 행보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은 자신의 스케줄과 행동원칙에 따라 움직이면 될 것. 북한이 연말이나 연초에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이 지속적으로 대화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사전에 전달할 필요가 있음 (스티브 비건)
  - 바이든 신정부는 북한이 도발한다면 보다 강경한 대응을 할 것 (수미 테리)
  - 미국은 국방비 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슈라이버)
- 북한의 도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 것을 주문

-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태도에 따라 북한도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 지속적인 압박만 하는 과거의 모습에서 다른 방법을 보일 필요가 있음. 압박을 한다고 해도 중국, 한국, 러시아 등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충분하지도 않았음. 따라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면 다른 접근도 필요 (조셉 윤)
- 2021년에는 대북협상의 기회가 커질 것. 내년엔 기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필요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미·북 정부 관료 간에 협력적 토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북한에게 최고의 협상 특사단을 파견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야 함 (에반스 리비어)
- 북한은 마냥 기다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각적 외교가 필요 (크리스토퍼 힐)

## ○ 통상부문 현상 평가

- 국제사회에서 일반 국가들의 무역의존도는 60% 정도. 북한의 경우, 2014년과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이는 북한 경제가 거의 개방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 제재에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
- 북한의 수출규모가 2013년을 100으로 삼을 때, 2019년에는 유엔제재로 10 수준으로 급감. 그리고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시 2, 3 수준으로 떨어져 북한의 수출 규모가 99% 감소한 것으로 보임.
- 밀무역으로 어느 정도 보충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수출규모 60~70%는 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함

## ○ 북한의 외화소득 규모 추정

- 북한 주민 개인들도 외화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필요한 외화를 모두 동원할 수 없는 상황
- 현재 북한의 외화보유고는 25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데, 매년 무역 적자가 30억불 정도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수단으로 외화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 제재의 허점 중 핵심은 사이버 해킹, 중국으로부터의 관광객 수입, 북한 공해의 이용권 판매 등
- 현재 상황에서 제재의 허점을 봉쇄한다면 수년 내 북한 외화가 완전 고갈될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면 식량, 에너지, 소비재를 수입할 수 없고, 로얄패밀리의 사치품도 살 수 없게 될 것임

## ○ 북한의 시장 상황 평가

- 시장활동을 통해 북한 가구들이 생활할 수 있었는데, 유엔제재로 구매력이 감소하고 소비재 수입도 감소해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시장활동을 통한 수입도 줄어들고 있는데, 탈북민 설문에 의하면, 제재를 기점으로 소득변화는 25%가 축소
- 소득 십분위에서 상위 10%, 하위 10%가 가장 충격이 컸음

## ○ 산업 부문 상황 평가

-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입은 제재 이후에도 중국으로부터 이어졌음. 이로써 무역적자는 발생했지만, 산업 부문이 작동할 수 있었음
- 그런데 코로나-19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완전 봉쇄되며 산업 부문에서도 충격 발생
- 2017년, 2018년 경제성장률이 -3, -4% 정도였다면, 2020년은 -5~-10% 성장률 기록할 것으로 전망. 그 결과 2018년부터 북한 GDP는 17~20% 감소

☞ 결론적으로 제재가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 판정이 난 것임. 즉, 제재가 김정은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낸 것

---

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